

# “참사가 남긴 과제 그대로... 책임·행동 보여달라”

## 광주 동구 학동 참사 5주기 추모식

### 유가족 등 100명 참석... 안전사회 만들기 다짐 330㎡ 추모공간 공개... 사고 버스 보존은 ‘답보’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광주 동구 학동 참사 5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사회를 다짐하는 추모식이 9일 광주 동구청사 일원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식에는 학동 참사 유가족을 비롯해 민행배 당선인, 임택 동구청장, 고광안 행정부시장, 세월호 참사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은 추모공연을 시작으로 참사 발생 시간인 오후 4시22분 묵념, 헌화, 추모사, 연대 발언, 추모공간 조성계획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로 구성된 416합창단은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은’과 ‘잊지 않을게’를 부르며 희생자를 추모했다.

유가족들은 이날도 진상규명과 추모공간 조성, 사고 버스 보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진의 광주 학동참사유가족협의회 공

동대표는 “5년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추모공간 조성 등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동구의 관리·감독 실패와 재개발 과정의 불법행위로 가족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추모공간이 조성되면 먼저 떠난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조용히 추모하고 싶다”며 “각화정수장 부지에 보관 중인 윤립 54번 버스의 영구 보존과 유가족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평범한 시민들이 예고 없이 희생된 그날의 아픔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다”며 “개발과 성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 없다는 교훈을 행정에 새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식에서는 참사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추모공간 조성안도 공개됐다.

추모공간은 학동 재개발단지 내 광주천과 학동행정복합센터를 잇는 녹지축에 약 330㎡ 규모로 조성된다. 희생자 9명을 상징하는 나무와 조형물이 설치되며, 추모와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질



9일 광주 동구청 주차장에서 열린 학동재개발구역 붕괴참사 5주기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학동참사는 지난 2021년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해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쳐 탑승객 17명 중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예정이다. 고광안 행정부시장은 “유가족의 뜻을 담아 시민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녹지형 추모공간을 만들겠다”며 “2029년 상

반기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모객들은 추모공간 계획 공개를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하면서 사고 버스

보존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학동 붕괴 참사는 2021년 6월 9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5층 건물

이 무너지며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17명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전신주 구리 흠친 60대 구속

광주와 전남 일대 전신주를 돌며 상습적으로 구리 전선과 접지선을 잘라 흠친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곡성경찰은 9일 전신주에 설치된 전선을 흠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와 전남 등을 돌아다니면서 전신주 사이의 구리 전선과 접지선을 도구로 끊어내는 수법으로 10여 차례 이상 흠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흠친 장물을 고철상 등에 처분해 최소 500만원 이상의 행간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3일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

##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책임자 11명 구속영장

### 사고 발생 6개월만... 광주시 공무원 등은 미포함

경찰이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발생 6개월 만에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공사 직접 책임자 11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작업자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광주대표도서관 시공사 관계자 및 감리자 등 공사 직접 책임자들이 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만 수사 대상에 포함됐던 광주시(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4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공사인 구일종합건설과 하청업체 등 공사 관계자 등 40여명을 입건했으며, 24명에 대해 출구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경찰은 구일종합건설 서울 본사

와 광주 현장사무소, 하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1900종, 전자정보 10만점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그동안 업계 전반에서 제기된 구조물 접합부 용접 불량과 콘크리트 타설 불량 등 일부 부실사공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은 주요 공사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추가 구속영장 신청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공도서관인 광주대표도서관은 상무지구 옛 상무소각장 부지(1만200㎡)에 연면적 1만1286㎡,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광주시민단체 “참정권 박탈한 선관위 수사를”

###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엔 우려

광주시민단체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투표 중단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시민의 참정권을 박탈한 선관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전국 9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일시 중단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선관위의 무능과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지만 일부 직원들이 투표일 전후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며 “수사기관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책임 있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사태를 조직적 부정선거 의혹으로 확대 해석하는 움직임에는 선을 그었다.

단체는 “시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엔 편승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며 민주주의를 흔들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극우 정치세력의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취약한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을 포함해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통제 장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알로에